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송명숙·노정현 진보당 후보들을 지지하라

관련 기사 3면



내 사태와
여권 위기 심화

2, 4면

미얀마
파업을 키워
군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5면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현실과 대안

6~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손해 볼까 봐
인명 희생시키는
유럽연합

9면

애틀랜타 총격사건
극우 부상에 따른
인종 증오 범죄

11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10면
영국 우버 노동자 승리 10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투쟁 12면
쿠팡 노동자 현실 12면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정선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시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돼 온 것 때문에 커져 온 대중의 환멸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불만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의 내곡동 땅 문제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의 엘시티 투기와 부패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말이다. 구체제 세력의 일부인 이들이 부패했다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텐데 말이다.

지난 수십 년간 권력을 누리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온 우파들의 부정·부패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명박은 온갖 부정·부패로 전과 16범이라는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우파 정치인들의 부패가 현 정부의 부패 행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꼬리 자르기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은 최근 언론



LH 부패는 문재인 하에서도 정부 부패가 여전함을 보여 줬다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토부장관 변창흠(전 LH 사장)

인터뷰에서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며 마치 일선 공직자들의 문제인 양 사태를 축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수사 방향과 대책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맞춰져 있다. 얼마 전 진행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공무원 재산 등록 대상 기준을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

패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로 고위 관료들이 저지르는 부패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최근 LH 부패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LH 사장이었고, 이번 사태를 처음에 감싼 장본인인 변창흠을 아직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유임시키고 있는 청와대가 일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메스꺼운 위선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국토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를 하며 시간을 끌고, 끌고러온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하며 수사를 통제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전수조사를 한사코 피하고 있다. 진정한 권력자들의 부패 문제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

최근 부정한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벌써 10명이나 된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문

제도 만만치 않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지만 구체적인 추진은 하지 않고 여영부영 시간만 끌고 있다. 여야는 또한 땅 투기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이번 부패사안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니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게 당연하다.

부패 — 시장과 국가가 구조적으로 얽힌 문제

정부는 이번 문제가 “적폐”라며 옛 정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패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 논리 속에서 계속해서 싹튼다는 것을 봐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가 벌이는 개발 정책에는 수익 추구와 이에 따르는 온갖 투기·부패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

신도시 개발뿐 아니라 공항, 도로, 철도를 짓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투기와 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드러났듯 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를 벌일 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들은 아예 자신이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압박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과 기업들 사이에 더 큰 규모의 유착과 뇌물 수수가 오가는 일도 흔하다. 4대강 사업이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뿐 아니라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에 이르는 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이 입찰 비리를 벌이는 일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건설 수주를 통한 부패는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한 통로로도 쉽게 활용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기업들의 이윤 논리와 동떨어진 중립적인 기구들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 권력 통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 권력 통제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갖는다.

군사력을 확대하고, 국내 통치를 공고하게 할 경찰이나 검찰, 관료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자본 축적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는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부패 고리가 형성된다.

기업들도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구를 활용해 더 많은 이익(개발 이익 포함해)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과(뇌물이나 향응 등으로) 선을 대려 한다. 정부 관료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부 권력자들과

기업 권력자들 사이에 씨줄과 날줄처럼 부패한 관계들이 형성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국가와 자본의 상호의존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부패한 공직자들의 개인적 치부 행위도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도 서민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시장 경제와 민간 기업들의 이윤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으려는 방향 속에서 이를 추구했다. 그래서 LH와 SH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해 왔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에게는 공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 시공을 맡기며 개발 이익을 나눠먹는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에서는 LH와 SH가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23조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경실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와 부패가 더욱 부추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파들은 LH 공직자들의 부패를 계기로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이 아닌 민간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으로 시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부패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윤 경쟁이 강화될수록 이를 위해 기업들이 국가 관료에게 선을 대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토지공개념?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제안한 것인데 토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3기 신도시 등 친시장적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인 연사일 뿐이다.

물론 진보·좌파 일각에서도 토지공개념과(좀 더 나아가) 토지 국유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만한 측면이 일부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국유화나 토지공개념(토지 소유에 따라 이득 몰수)은 지배계급 전

체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일부 실행된 사례는 바로 좌파가 가장 강력했던 노태우 정권 때였다.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우파 세력이 이 법들을 터무니없이 ‘사회주의’, ‘사유재산 부정’ 등으로 공격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등을 내리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지배자들은 이 정도의 세금 인상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를 달성하려면 토지 소유주들(이들은 주로 자본가들이다)에 맞선 혁명적(또는 준혁명적)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혁명에 육박하는 투쟁이 벌어진다면 왜 굳이 토지 국유화에서 멈춰야 할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토지뿐 아니라 자본 자체를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진정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노동자·서민을 위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송명숙·노정현 진보당 후보들을 지지하라

이번 재·보선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하고 한심한 주류 양당을 좌파적 가치들에 따라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대중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이나 모두 지난 10여 년의 정치 행보는 자본가 계급 정치인일 뿐이었다.

박영선은 경제를 잘 안다며 결국 삼성 변호인 구실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편, 오세훈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다 용산 참사를 유발하고, 새빛둥둥섬처럼 세금만 낭비한 전시 행정에는 돈을 쳐바르면서 무상급식에는 서울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반대한 인물이다.

이 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세훈이 “개혁 우파”라서가 아니라 박영선이 개혁적인 면모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김영춘은 멀쩡한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노무현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왼쪽) 부산시장 후보 노정현(오른쪽)

코스프레’를 해 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김영춘이, 그 시절 진보 교수를 자임했고 훗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박형준보다 더 나은(또는 덜 나쁜) 면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노동자 대중과 진보 염원 대중에게 차악조차 못 된다.

실제 행보와 정책은 도토리 키처럼 고만고만하지만 말투와 이미지만 조금씩 다른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를 침묵하게 비판하며 주류 양당



사진:송명숙 진보당

과는 다른 진보·좌파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4, 5년마다 정권 심판을 한다며 주류 양당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대안일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가 노동계와 진보 염원 대중을 대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민주

당 정부와 우파 야당의 부패한 정치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둘을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이들 진보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류 양당과는 다른 대안을 찾는 몇십만 서울·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땀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으며 올해부터 초·중·고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배치해서 학급을 분반해 학급 밀집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3월 18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향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3학년에 배치된 기간제 교사는 1961명이다.

그러나 이 중 과밀학급 분반에 투입된 기간제 교사는 151명(3월 17일 기준 정부가 발표한 계획 인원의 7.7퍼센트)에 불과하다. 기간제 교사 지원 계획이 학사일정 확정 후에 졸속으로 시행된 데다가, 학교에 유희교실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밀학급 2145곳은 여전히 높은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과밀학급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정부의 과밀학급과 방역 대책은 임시변통식 땀질 처방 뿐이다

결국 분반할 수 없는 과밀학급에 협력교사로서 기간제 교사 1060명이 배치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교실 내 밀집도만 높아졌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땀질식 방역 대책만 내놓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랴부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충원한 정부 조처는 학교 현장에 그만큼 정규 교사가 부족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정부 조처는 실질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과밀학급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정규 교사 충원이나 추가 교실 마련 등에는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임용 교사수를 심각하게 줄이고 있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 임용 합격자 대기 발령 인원은 2020년 357명, 2021년 300명으로 총 65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자 발령은 총 3명에 불과할 정

도로, 역대 최악의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도 2~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삼중고

한편, 정부의 임시변통식 대응으로 교사들의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 교사들은 방역 업무 증가와 원격수업, 등교수업까지 준비하며, 더러는 긴급돌봄까지 맡아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창 개학으로 바쁜 3월에는 교육부가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지정한 EBS온라인클래스의 시스템이 불안정해, 교사들이 올려둔 강좌가 사라지거나 진도를 확인 기능에 오류가 생기는 등 온라인 수업이 큰 혼란을 빚었다. 그간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학생들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등 온라인 교육은 교사들의 자발적 연수와 사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해 왔다. 이 서비스들 중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사들은 온라인 상 안정적 수업 진행과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 방역을 위한 인력 지원 또한

너무 미미하다. 방역 전문가가 아닌, 임시 방역 인력을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고, 이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방역 지원 인력 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지원이 미비해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까지 방역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된 긴급돌봄은 교사와 돌봄전담사 사이의 갈등만 부추겼다. 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교사와 돌봄전담사에게 일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 2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임시방편 대응만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대중적인 항의 운동이 벌어져야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내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김문성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 (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현 정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부패 사건으로 규정돼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석연찮은 행동과 역겨운 위선은 불신을 더 키웠다.(그런데도 자칭 진보 세력 중에 이렇게 규정한 곳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은 비리 적발과 응징보다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거의 언제나 대형 부패 사건으로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제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무현은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자증지란

한편, 공교롭게도 이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친정부 노선을 걸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배후설도 나왔다.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지자 자증지란 조짐이 이는 것이다. 배후설 따위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등장한 새로운 정부 최고위층이 정부 부패라는 대표적 적폐를 전혀 청산하지 못/

안 했다는 것이다.

LH 건에 대한 태도는 한명숙 뇌물수수 판결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가며 다시 뒤집으려 한 것과 너무 대조된다. 한명숙 건은 6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미 실행까지 살고 나온 건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든가 판결이 바뀔 리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명숙도 정작 재심은 청구하지 않는다. 그저 이 건을 '검찰 개혁'을 포장할 명분 찾기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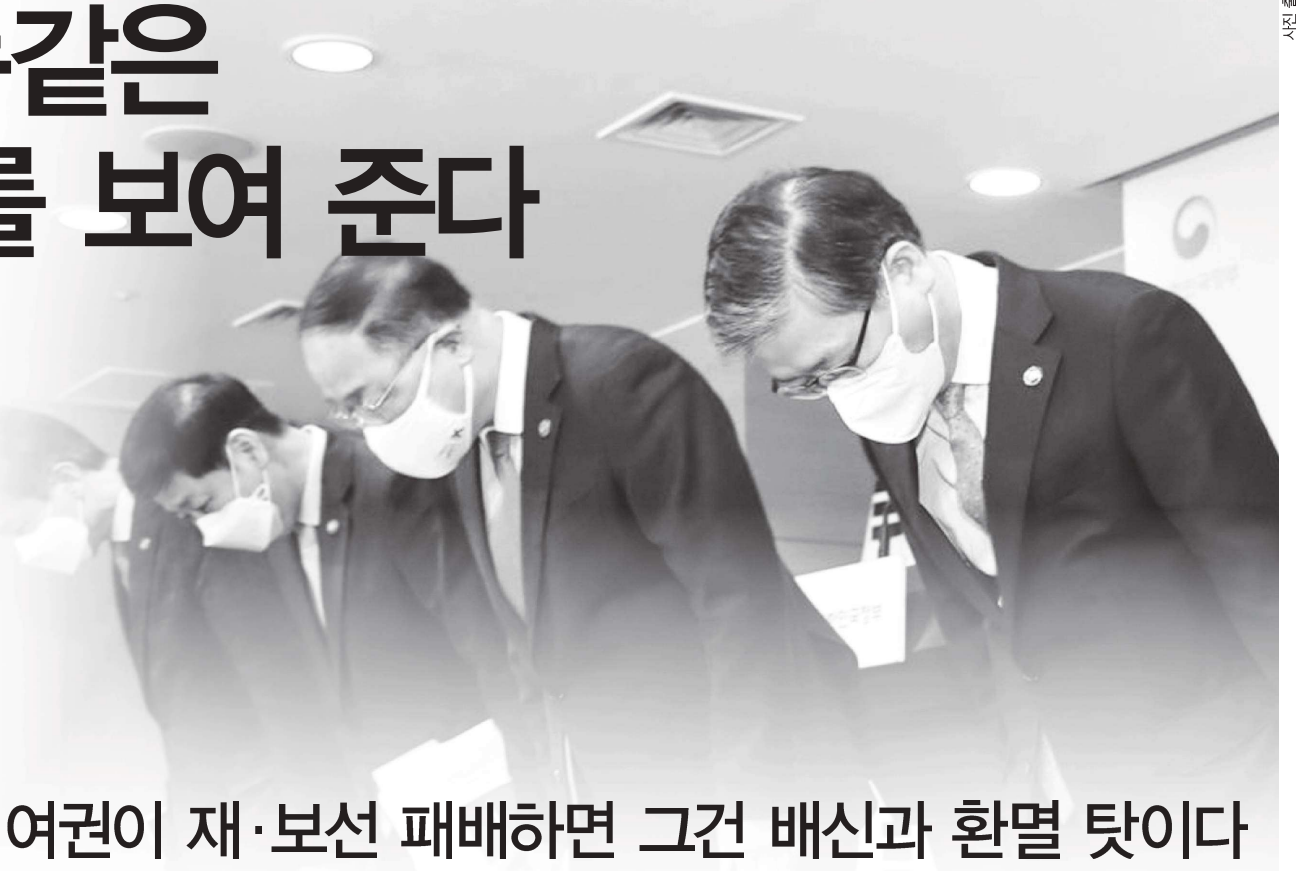
결국 LH 건 대응 문제로 문재인 검찰 '개혁'의 정당성도 파탄났다. 그것을 감쌌던 자들이 틀렸고, 그 위선을 왼쪽에서 비판한 자들이 옳았다(후자가 극소수였을지라도).

정부가 이번 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가소로운 변명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여권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어야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층이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이 복마전을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검·경의 많은 간부들이 그동안 이런 부패의 일부였다.

우파야당이 정부 부패에 공세를 퍼며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말만 무성하고, 특검 협상을 핑계로 주류 양당 모두 시간만 끌고 있다. 우파야당의 태도도 문재인이 합동조사로 시간만 끌고 다들 바 없다.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문 진영의 정치적 고향인데도 부산은 일찍부터 민주당의 패색이 짙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엘시티 비리, 이명박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연일 터뜨리는데도 말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특권과 부패 문제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 즉 배신감에서 비롯한 환멸과 분노가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 지지로 표현되는 듯하다. 민주당이 기댈 언덕이 있다면 그건 국민의힘이 더 싫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 투표가 벌어지는 요행수뿐인 듯하다.

현재 선거 판세가 대중의 우경화를 반영하지는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중도나 진보에서 별다른 선택지를 발견하기 어려움을 반영할 뿐이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건 우파의 정치적 재기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대중의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다.

심판

민주당 심판 정서의 확산은 차기 대선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많다.

특히, 윤석열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 적폐 청산 약속이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비껴 나가듯이 표현된 것이다. 윤석열은 권력층 부패 수사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가 그를 못살게 굴었으며, 그 자신이 공정과 정의의 정치적 브랜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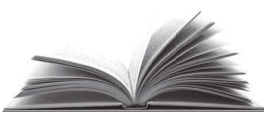
결정적 타격은 윤석열이 정권의 부패를 비난하며 항의성으로 사퇴하는

와중에 LH 부동산 투기 비리가 터져 버린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의 시장주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실물경제 침체 상황도 반영하는 것이다. 시중 자금이 산업으로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투기로 몰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스스로 집을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으로 만들겠다고 해 놓고 그 말에 기대를 걸었던 서민층을 철저히 배신했다. 결국 부동산 실패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패와 공정·정의의 파탄뿐 아니라 경기회복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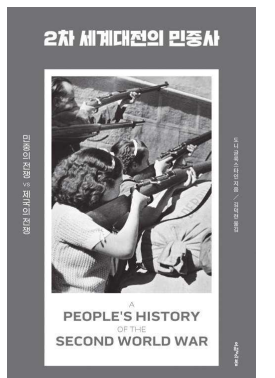
이런 정치 위기로 권력 누수 현상이 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법무부가 모두 반대하는 일이 있었다. 검찰 단속 문제로 여권 내 갈등이 벌어져도 문재인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한명숙 뇌물수수 판결을 뒤집으려는 법무부의 시도가 좌절된 것도 정권의 힘이 빠진 것을 보여 준다.(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과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만만찮은 벽이다.)



신간 소개

도니 글럭스틴의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

도니 글럭스틴 지음, 김덕련 옮김
오월의봄, 596쪽, 27,000원



이원웅

제2차세계대전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다룬 한국어로 된 책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이 주제를 다룬 흥미로운 책 《2차 세계대전의 민중사》(오월의봄, 2021)가 번역·출간됐다.

저자인 도니 글럭스틴(출판사는 저자의 성을 “글룩스타인”으로 표기했으나 저자 자신이 부르는 발음을 따라 “글럭스틴”으로 표기한다)은 영국의 혁명적 정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고 에든버러대학교에 재직 중인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이다.

글럭스틴은 이 책에서 연합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는 신화를 반박한다. 연합국들은 파시즘이 발흥하던 때가 아니라 추축

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움직였다.

나치의 점령은 그에 맞선 저항을 불렀는데, 그런 저항에 참가한 대중은 나치를 몰아내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바꾸려는 염원도 드러냈다. 연합국은 이런 염원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다. 대중적 저항 운동이 일어난 그리스에서는 가차없이 짓밟기도 했다.

글럭스틴은 여러 사례를 통해 연합국의 진정한 관심사가 해방과 민주주의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나치의 폭두각시 정권인 비시의 프랑수아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미국은 현지 통수권자 자리에 나치 협력자인 프랑수아 다틀랑을 다시 앉혀서 하수인으로 삼고자 했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에서 벗어난 후에도 비시 정부 인사였던 장 드루를 통해 베트남을 계속 지배했다.

독일이 마침내 항복했을 때 연합국은 나치 정권이 붕괴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안티파’(반(反)파시즘, 주로 공산당이 주도했다) 조직들보다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남은 나치들과 협력하는 편을 선호했다.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나치 전범 처벌은 결코 철저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인들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추축국인 일본뿐 아니라 연합국인 영국·네덜란드와도 무장 투쟁을 벌여야 했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제2차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여러 흥미롭고 고무적인 저항 사례들과 그 저항의 다양한 계급적·민족적 측면을 글럭스틴은 보여 준다.

그런데 글럭스틴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2차세계대전의 성격을 수정하

는 것으로 나아간다. 즉,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과 “인민 전쟁”(한국어판에서는 “민중의 전쟁”으로 번역했는데 ‘민중’이라는 말의 특수한 형성 과정으로 인한 그 내포 때문에 오해를 자아내는 표현인 듯하다)이 나란히 진행된 “평행전”이었다는 것이다.

병행?

그런데 이와 같은 공식은 혼란스럽다. 예컨대 글럭스틴은 나치 점령 하의 무장 저항과, 식민지에서 벌어진 민족해방투쟁 등을 “인민 전쟁”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몽땅 그린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나 노동자 파업 등도 연합국 내의 “인민 전쟁” 사례로 제시된다. 하지만 연합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이기도 하고 인민 전쟁이기도 했

다는 규정은 결국 그 전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신화에 문을 열어 주기 쉽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글럭스틴의 “인민 전쟁”과 “평행전” 개념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Leandros Bolaris, “Two in One?” <http://isj.org.uk/two-in-one/> 이 글은 글럭스틴의 책이 나온 뒤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실린 비평이다.)

마지막으로 짚을 점이 있다. 번역의 아쉬움인데, 원문 대조 없이는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운 문장들이 꽤 있거나 명백한 오역도 적잖다. 책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조금 낫지만 기자는 결국 원서와 대조해 가며 읽어야 했다.

미얀마 파업을 키워 군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자일스 자이 옹파콘

3월 17일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시위대, 미얀마 경제로 위험한 게임… 재계 경고.” 파업과 시위가 사장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뻐할 일이다. 미얀마 군부의 발표로 목숨을 잃은 시위자가 200명을 넘긴 만큼 더욱 그렇다. 경제를 마비시키는 파업은 군사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서 핵심이다. 거리에서 군대와 격돌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들은 빈발하는 파업·시위를 두고 “위험한 게임”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일궈 온 경제적 성과가 무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윤을 걱정하는 것이다. 과거에 이 사장들은 군부가 통제하던, 쿠데타 이전의 가짜 민주주의에 아무 불만이 없었다. 사장들은 인권 유린을 묵인했다. 서방 정부들은 군부가 만든 헌법하에서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헌법 덕에 군부는 쿠데타 전에도 실질적 권력을 부지할 수 있었다. 사장들과 유엔이 평범한 사람들의 안녕을 우려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사장들과 이른바 “국제 사회”가 미얀마인들을 해방시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철도, 병원, 공무원, 의류 제조, 은행 노동자들이 모두 총파업에 참가해 미얀마 경제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켰다. 이런 행동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은 파업을 멈출 때가 아니다. 행동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노동자 평의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1988년 총파업 때처럼 말이다. 그렇게 생긴 노동자 평의회는 식량·서비스 분배를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통제하며 기존 국가에 도전하는 이중 권력의 시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얀마 밖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미얀마 노동자들을 도울 연대 모금을 벌여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7호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Myanmar Now

3월 19일 거리로 나선 만달레이 노동자들 경제를 마비시키는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사태의 주도권을 쥐게 할 수 있다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와 행진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다

찰리 킴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해외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영국 각지에서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규모의 집회가 벌어졌다고 한다.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는 적어도 19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 온라인 행사가 잡혔다. 행사는 3월 20일에 진행됐다. 21일에도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독일, 아일랜드, 미국, 한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포르투갈, 카탈루냐,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주(州)에서도 한 소규모 단체가 모여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는 사람들이 국영방송 본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무실을 잇는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안제이는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우리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 선전기구와 유럽연합의 반(反)이민 정책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이민 정책으로 지중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폴란드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의 공격 사례를 담은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 ‘국경은 열고, 정부는 문 닫아라.’ ‘파시즘 없는 바르샤바, 폴란드, 세계.’ ‘연대는 우리의 무기다.’”

집결

독일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모였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는 이렇게 말했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저항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고 우리의 연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여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그중 아테네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주민, 난민이 수백 명 모였다. 그리스의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은 이렇게 밝혔다. “요새화한 유럽은 난민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기업주들과 부자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유럽을 뜻합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3월 20일 국경 개방과 난민 인정, 모든 난민의 완전한 권리와 주거지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철책을 허물고, 수용소를 폐쇄하라.” KEERFA는 활동가들에게 지난해 그리스에서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을 제거한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만프레드는 이렇게 전했다. “거대하고 다채롭고 젊고 분노한 시위 행렬이 비엔나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1년 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이래로 이토록 큰 연대 시위는 없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좌파가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기쁩습니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이곳이 삶의 터전인 가족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번 행동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결합

터키에서 오잔은 이렇게 전했다. “수도 이스탄불과 테키르다시(市)에서 소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행동’을 기후 파업, 여성 차별 반대 행동과 결합했습니다. “정부는 이스탄불 협약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 근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대적인 공격입니다. “20일 터키 전역에서 여성들의 행진

이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카드괴이 지구에서도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인종차별 반대 집회를 독자적으로 열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치르고 대규모 여성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레네는 이렇게 전했다. “덴마크 3대 도시[수도인 코펜하겐, 오르후스, 오덴세]에서 ‘인종차별과 차별 반대 연합’과 광범한 지역 연대체들이 조직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을 방어하고, 사회 최상층의 인종차별적 연상에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가의 인종차별, 경찰 폭력, 이슬람 혐오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졌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도 요구했다.

카탈루냐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극우 정당 북스가 선거에서 11석을 얻어 카탈루냐 의회에서 입성한 지 1달만의 일이다. 영국의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의 카탈루냐 자매단체인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연합’(UCFR)은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카탈루냐 전역에서 20여 개의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집회, 온라인 행사, 그 외 행동들이 포함됐다. 이 행사들 중 일부는 #STOPVOX [해시태그 ‘북스를 저지하라’] 캠페인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새롭게 생겨난 지역

단체들이 조직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연합’ 활동가이자 스페인의 혁명적 좌파 단체 ‘마르크스21’의 회원 다비드 카르발라는 이렇게 전했다. “이러한 행동은 새롭게 생겨난 단체들을 견고하게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르셀로나 근처 테라사시(市)의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연합’ 모임이 한 사례입니다. 이 모임은 북스 반대 캠페인 속에서 건설됐고, 그 도시에서 극우의 선거 활동에 반대하는 수백 명 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19일 밤에 진행된 집회에서는 흑인 청년 알리운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은 제도적 인종차별을 증언했습니다. “만연한 이런 문제에 대해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연합’ 모임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 반대 연합’ 카탈루냐 지부가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북스에 맞서 싸워야 하고, 국가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며, 특히 일부 좌파들도 물론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운동이 성장한 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진행 중인 또 다른 과제는 스페인의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운동이 건설되도록 고무하는 일입니다. 상당수 지역들에서 극우는 이곳 카탈루냐보다 더 강력합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7호 번역 김지혜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트랜스젠더가 마주한 차별의 현실

성지현

얼마 전 김기홍·변희수 씨의 부고가 연이어 알려졌다.

1년여 전, 성전환으로 인한 강제전역 상황에서 변 하사가 눈물을 터트리며 한 기자회견을 보며 그를 멀리서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성소수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이후 추모 행사와 행동들이 이어졌다.

김기홍 씨는 기간제 교사였고, 변희수 씨는 군인이었다.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진 그들의 삶은 평범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얻게 된 성별과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한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가다 어느 날에 어떤 계기로 커밍아웃 했다.

타고난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비교적 소수이지만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 문제는 이들의 존재가 아니라, 성별이분법으로 사람들을 옥여넣고 트랜스젠더를 혐오·차별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이들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이유다.

20년간의 변화 — 가시화와 인식 개선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년 전 하루 수 씨가 연예계에 데뷔하면서부터다. 2006년에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겼고, 관련 정보 교환도 더 활발해졌다. 트랜스젠더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점차 알려졌다.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동성 애자인 트랜스젠더, 남녀 구분에 벗어나 자신을 정체화하는 논바이너리 트

랜스젠더 등.

20년이 지난 지금, 분명 트랜스젠더는 과거보다 더 많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사회적 태도도 점차 관용적으로 변해 왔다.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개인 사정이므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20년 전 51퍼센트에서 지난해 60퍼센트로 늘었다. 20~40대는 80퍼센트였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몇 해 전부터 트랜스젠더 차별에 저항하는 국제 기념일에 집회가 열려 왔다.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

더 추모의 날'로, 세계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에 경각심을 높이자는 날이다.

얼마 뒤면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3월 31일). 2009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된 이날은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념하고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항하자고 호소하는 날이다. 이를 맞이해서 오는 3월 27일 한국에서도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집중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혐오 부추기는 우파, 차별 유지하는 문재인

개신교 우파들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가 가족 가치를 허물고 비정상적 성문화로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진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기독일보>와 같은 우파 개신교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우파와 연결돼 있는 우파 정치인들은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며 혐오를 부추겨 왔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은 이런 주장을 인용하며 개인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 신체적 특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국가인권위법에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자금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이 마치 문란하고 문제적인 행사로 언급되며 서울광장 개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안철수는 '퀴어퍼레이드'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퀴어특구'에서 따로 행사를 하라며 혐오를 부추겼고, 오세훈도 서울광장 개최는 '시장이 결정할 일 아니'라며 회피했다. 민주당 박영선은 여전히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사과하고 있지 않다.

고 김기홍 씨는 생전 SNS에 "보고 싶지 않은 시민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하고 남겼다.

4년 전, 많은 성소수자들이 노골적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우파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르리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다른 많은 일에서 그랬듯 문재인 정부는 차별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변 하사는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표'를 중시하며 성소수자들에게 상처 주기 일쑤였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던 윤호중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녹색당 비례대표인 김기홍 씨를 겨냥해 "성소수자 문제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 하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가 됐는데도 차별금지법조차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

주류 정당들과 문재인 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개선에 냉담한 데는 더 근본적 이유가 있다.

트랜스젠더 차별은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방식인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와 관련이 깊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지배계급의 일부로서 이런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보수적 성관념을 유포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가짜 진보'는 차별을 안/못 없앤다.

성소수자 운동이 우파에 반대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 7면으로 이어짐

여전한 차별의 현실

20년간 변화가 있었음에도, 혐오와 차별의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트랜스젠더는 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천대받는 집단 중 하나다.

우선, 인식 개선조차 불안정하고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보는 편견이 많다. 이 체제 자체가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체계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이다.

또, 김기홍 씨나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이나 트랜스 여성의 공개적 여대입학 논란에서 보듯이,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늘었지만 이와 함께 우파들의 비난과 혐오의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안타깝게도 일부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편견에 동조하며 트랜스젠더를 비난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혐오적 선전과 활동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므로, 거짓 주장과 혐오, 편견에 단호하

게 맞서는 게 중요하다.

트랜스젠더가 가시화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 매우 어렵고, 적절한 의료적 지원도 없다시피 하다.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성별 이분법을 기준으로 뒤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은 아예 없는 셈 무시하고 있다.

변 하사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히고 그를 응원한 부대 동료들이 있었음에도, 육군이 성전환을 "심신 장애"라며 규정하며 잔인하게 군대에서 내친 일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군대와 같은 더 억압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트랜스젠더는 가정, 일터, 학교 등 곳곳에서 차별적 현실을 마주한다. 어디에나 쓰이는 신분증에는 태어날 때의 성별 번호가 기재된다.

법적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

가가 필요한데, 법원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특히 관련 예규에 여전히 성전환 수술과 생식능력 제거를 명시하는 것은 아주 문제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의료적 성전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 트랜스젠더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성전환 비용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엄두도 못 낸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변 하사와 지난해 숙대에 합격한 트랜스젠더는 이 모든 것을 마쳤는데도 커다란 차별과 혐오에 맞닥뜨려야 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도 어렵다. 한 연구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트랜스젠더 중 46퍼센트가 무직이었고, 30퍼센트가 비정규직이었다.(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 관련 경험과 장벽)

이런 차별의 결과로 트랜스젠더의 자살 시도율은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정진희

트랜스젠더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트랜스젠더 차별의 근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차별이나 동성애 혐오, 성차별,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한다. 차별이 후진적 사상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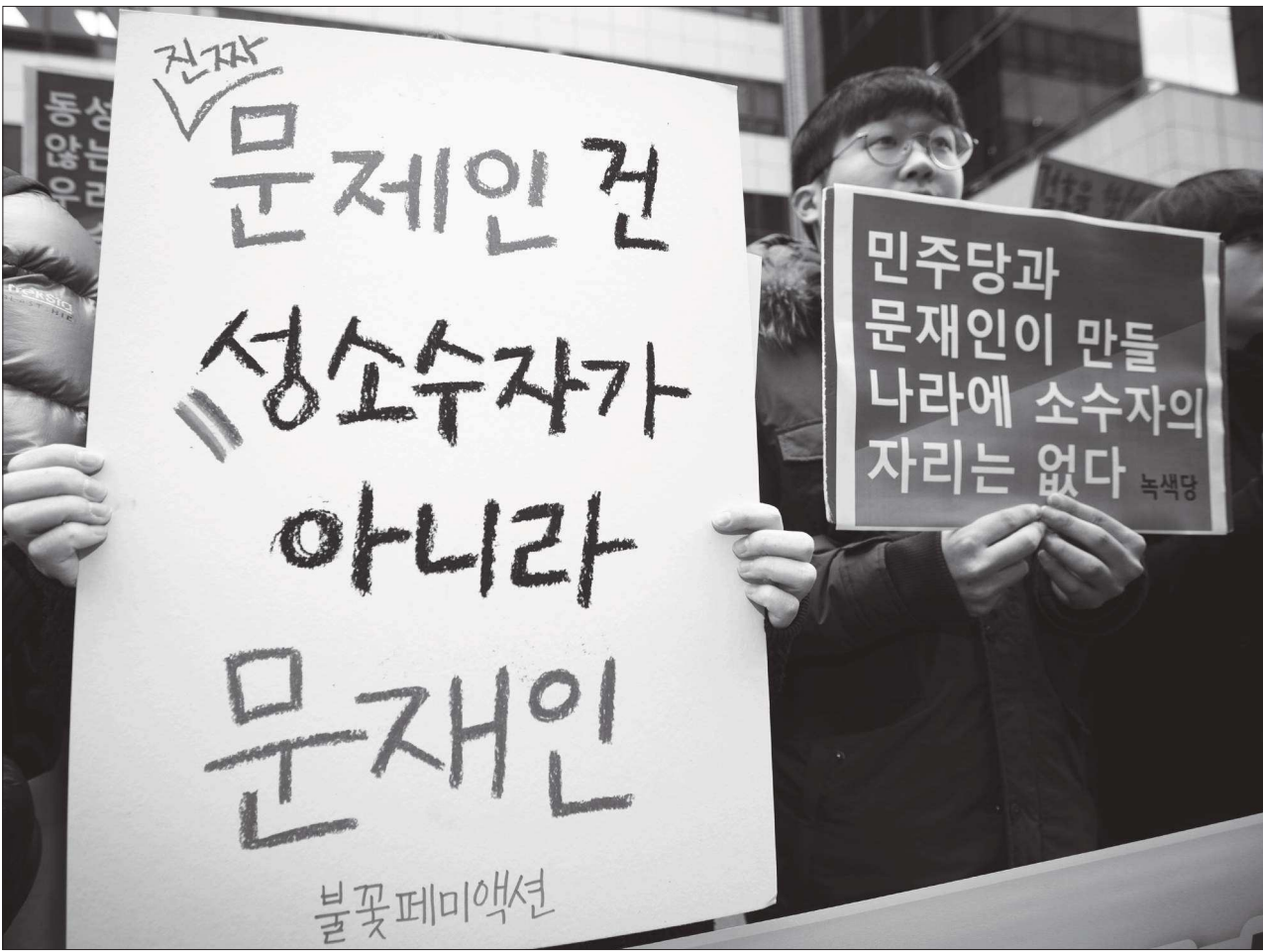
그러나 인류학·고고학 등 여러 연구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체계적인 차별이 없는 무계급 사회가 있었다. 이런 사회는 인류 역사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트랜스젠더 차별도 인류 역사에서 늘 있지 않았다. 여러 성별의 존재와 표현, 성적 지향이 인정되는 사회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연구가 많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매우 많은 사회에 성별 다양성을 표현하고 그 성별에 따라 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다.

사실, 출생시의 성을 바꾸고 싶어한 사람은 인류 역사 내내 매우 많았다. 이런 것은 이성의 복장으로 여겨지는 것을 착용하거나 외모를 그렇게 바꾸거나 혹은 반대 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선 이런 성역할 바꾸기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130개가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서 타고난 성과 상관없이 성역할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존재했다는 조사가 있다. 성이 남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혹은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부족도 많았다.

라코타족에 ‘윙트’, 샤이엔족에는 ‘히텐히’, 크로족에 ‘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절반 남성, 절반 여성” 같은 뜻을 나타낸다. 일부 북미 원주민은 이런 사람들을 ‘두 영혼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상담사, 이야기꾼, 교사, 치료사 등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2017년 2월 민주당 앞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트랜스젠더 차별의 근원

트랜스젠더 차별은 역사의 특정 시기인 계급 사회에서 생겨났고 자본주의에서 강화됐다.

계급 사회에서 성역할을 규정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주요 제도는 가족이다. 계급 사회에서 가족은 지배 계급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이고, 피지배계급의 가족은 다음 세대 노동인구를 기르는 구실을 한다. 배타적이고 남성이 우위인 가족 제도는 계급 사회의 등장과 함께 발전했고, 계급 사회에서도 사회의 생산 방식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역사에서 감춰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찾아내며 트랜스젠더 차별의 기원을 밝힌 《트랜스젠더 투사》라는 책이 있다(원제는 《Transgender Warriors》로 한국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책의 저자인 레슬리 파인버그는 2014년에 사망한 미국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자 레즈비언, 마르크스주의자였다. 1996년에 나온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차별을 분석한 선구적인 저작이다.

파인버그는 이 책에서 계급 사회가 등장해 남성 우위의 가족 제도가 발전하면서 성역할이 더 엄격해지고 성별 범주가 더 협소화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난도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분석은 엥겔스가 여성 차별의 기원을 밝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사용한 역사유물론적 방법을 따른 것이다. 계급 사회 이전엔 성별 분업이 있어도 이것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엥겔스는 인류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남성 우위의 일부일체제가 생겨났고 그 결과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344호 기사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참조).

계급 사회가 등장해 성역할 구분이 엄격해지면서 크로스드레싱(이성 복장 착용) 등 성별 구별을 흐리는 행동이 비난받고 금지되기 시작했다. 레위

기와 신명기 등 일부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계급(남성)이 자신의 부를 보호하고 대다수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이다.

변화는 여러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에 무역과 정복으로 상당한 잉여생산물이 축적됐다. 이제 여성의 성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하고 아이를 낳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젠더 다양성을 표현하는 행동이 더 배척되기 시작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동안 트랜스젠더 표현이 지배계급에게 허용됐다. 그것이 귀족에게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배계급 내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자, 성별 규범을 벗어난 표현은 때때로 편리한 정치적 비난 대상이 됐다.

342년에 로마의 법은 “남자가 여자의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처

벌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390년에는 “천하게 자신의 성을 포기하는 남성”을 “최고 형벌”(화형)에 처한다는 황제의 칙령이 발표됐다.

지배계급의 일부인 중세 교회는 트랜스젠더를 악마화하면서 박해했고, 크로스드레싱과 트랜스젠더 행동을 농민 예식과 축하 행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중세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종종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가 있었다. 영국은 인도와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곳의 다양한 성별 표현과 성적 행동을 범죄 시하며 탄압했다.

자본주의와 핵가족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차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가족은 큰 변화를 겪는다. 공장 제도가 등장하면서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이

분리됐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노동계급 가족이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지배계급은 자본을 계속 축적하려면 노동력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19세기 중엽 이후 노동계급 가족이 다시 확립됐는데, 지배자들은 이성애적 핵가족 모델을 찬양했고 여러 법을 만들어 성 행동을 강력히 규제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의 핵심 기능은 노동력 재생산이다. 낱알의 노동력 재생산과 미래 세대의 노동력 재생산이 개별 가족 단위에 맡겨져 있다. 개별 가정에서 양육, 간병, 노인 돌봄 등이 주로 여성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런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배계급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족 제도는 지배계급에게 비용 절감뿐 아니라 보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노동계급과 사회를 통제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고정

▶ 8면으로 이어짐

▶ 6면에서 이어짐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아로새겨진 트랜스젠더 차별

트랜스젠더 차별을 완화하려면 적어도 서구 일부 나라와 같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적 성전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별금지법도 당장 제정돼야 한다. 국방부는 또 다른 변희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트랜스젠더 장병이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물론, 사회도 해야 한다.

이런 개선안들은 이미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일부 주, 덴마크 등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권리가 법·제도적으로 전진한 일부 서구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모순적이고 차별은 여전하다.

이 나라들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시민동반자관계법, 동성결혼,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긴축을 추진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며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크게 고통받았다. 긴축과 코로나19의 고통은 계급적으로 달랐는데,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평범한 노동계급이기도 하다.

극우 포퓰리즘과 파시스트의 성장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도 늘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과거에 정취한 성과들을 공격하려 한다. 2008~2016년 사이에 유럽에서 100건 이상의 트랜스젠더 살해가 보고됐다.

나라마다 종교·문화적 특징, 위기와 빈곤의 수준, 투쟁의 역사 등에 따라 트랜스젠더 차별의 형태와 강도는 다양하지만, 모든 나라에 트랜스젠더 차별은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차별은

가족제도와 그것이 재생산하는 이분법적 성역할에 기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이자, 이 체제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온갖 악행 중 하나이다.

변 하사와 김기홍 씨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트랜스젠더 차별의 진정한 근원을 이해하고, 차별을 존속하는 체제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 7면에서 이어짐

된 성 역할이 마치 남성과 여성의 본성인 것처럼 설파한다.

이렇게 가족 제도에 기반을 둔 엄격한 성역할과 규범 강요는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차별을 낳고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나 양육과 돌봄이 개별 가정 단

위로 이뤄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문제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해방을 이루려면

김기홍 씨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보다는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에 다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 항의를 지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을 더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유난히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사회운동 내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적인 태도가 종종 나타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차별에 효과적으로 반대하려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보수적 시각에 반대해서 논쟁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페미니즘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선 투쟁을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분리시킨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와 여성 차별의 근원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트랜스젠더 차별이 강화되면 보수적인 성역할과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돼 대다수 여성에게도 해롭다. 차별은 우리 편을 갈라놓고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키기에 모든 차별에 반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면서, 동시에 트랜스젠더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에도 맞서야 한다. 투쟁을 통해 개혁을 성취할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해방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가족 제도는 중요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하기에 지배계급은 가족 제도를 지키려 하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차별을 계속 부추긴다.

자본주의를 뒤엎고,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성별 이분법이 강요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중요성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노동계급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사회 집단이 지니지 못한 특별한 힘이 있

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은 일터(공장, 사무실, 병원, 학교 등)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데서 나온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자신이 만든 가치의 극히 일부분만 가져간다.

이런 착취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프다. 하지만 착취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생긴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면 이윤 생산이 중단된다. 파업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하면 개별 자본가나 지배계급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이다 진보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노동자들의 의식은 불균등하다).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객관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소수이고, 대다수가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이 단결된 투쟁을 벌이면 지배계급은 위협받는다. 그 때문에 지배계급은 언제나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자 중요하지 않은 차이들(성별, 성적 지향, 민족, 피부색, 종교 등)을 부각하며 이간질한다. 그래서 차별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루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혁명적 변화뿐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장기 불황의 시기에 지배계급은 대중에게 이로운 개혁을 주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성과조차 공격한다.

이런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개혁을 성취하려면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 대중 투쟁만이 실질적 개혁을 성취할 수 있고, 대중의 자신감을 높이고 의식도 바꾼다.

역사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가 가장 크게 향상됐던 때는 노동계급의 정치 투쟁이 고양될 때였다. 러시아 혁명이 그 점을 가장 잘 보여 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성 해방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1921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게이 결혼식에 크로스드레싱을 하고 온 사람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과 성소수자 해방

러시아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 정당은 차별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필수적인 일부로 여겼다.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서기가 아니라 인민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혁명 정부는 결혼과 성행위에 관한 낡은 법률을 폐기했다. 동성애는 합법이 됐다. 당시 독일은 동성애를 5년형, 영국은 종신형에 처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사이의 개념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는 동성애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 동성애자들을 국가 기관에 고용했다. 공공연하게 게이로 알려진 게오르기 치체린은 1918년에 외무인민위원(지

금의 외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이혼도 쉬워졌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한쪽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해졌다. 1920년에는 낙태도 합법화했다. 볼셰비키는 진정한 평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개별 가족이 짊어진 양육과 가사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했다.

1923년에 지도적 볼셰비키인 그리고리 바트키스는 <러시아에서의 성 혁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회의 접근법이 잘 나타난다.

“소비에트 법률은 …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국가가 성 문제를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유럽의 법률이 사회 도덕에 어긋난다고 규정했던 동성애, 소도미 등 성적 만족을 위한 다양한 행위를 소비에트 법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한

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성 혁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자 14개 외국 군대가 러시아를 침략하고 국내의 반혁명 세력들이 내전을 일으키면서 혁명은 궁지에 빠졌다.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 혁명이 패배하면서 러시아 혁명은 고립돼 쇠퇴했고 결국 패배했다. 1920년대 말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서방과 경쟁하며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을 급속히 추진하며 자본주의 가족 제도를 다시 확립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스탈린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상을 줬고, 낙태와 동성애를 다시 불법화했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직후 일어난 급속한 진보는 노동계급 혁명이 성 해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 준다.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선 연대와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

차별받는 집단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 이런 투쟁이 성공하려면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런 연대를 특정 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노동계급의 광범한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해 강력한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배자들에게서 양보를 얻어내고 보수적 편견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지난 대중 반란과 혁명이 남긴 교훈을 살펴보면,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지하고 마침내 승리하려면, 혁명적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혁명적 조직은 투쟁을 건설하고 각각의 투쟁을 연결하며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망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 오늘의 투쟁에 적용하고 미래의 투쟁에 대비한다.

우리는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

께 투쟁하면서 혁명적 조직도 건설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또는 성소수자의 투쟁은 계급투쟁과 별개가 아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대다수가 노동계급의 일원이기에 노동계급이 겪는 다양한 문제(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장시간 노동, 주택 부족, 연금 부족 등)를 겪는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보수 야당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배자들은 착취를 강화하면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자 보수적인 생각을 부추기며 차별도 강화한다.

트랜스젠더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는 가능하다. 차별에 맞선 투쟁을 자본

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의 일부로 여기며, 단결된 투쟁과 혁명적 조직을 함께 건설해 나가자. 노동계급의 투쟁이 발전해 자본주의를 전복한다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추천 책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외 지음, 정진희 엮음, 책갈피, 184쪽, 9,000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손해 볼까 봐 인명 희생시키는 유럽연합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몇 주 전만 해도 유럽연합은 꽤 호
못해 했다.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처
리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분열시키는 데 실패했
다. 지난한 브렉시트 합의와 무역 협정
에서 유럽연합은 자신의 우위를 이용
해 영국에 아주 조금만 양보할 수 있었
다.

팬데믹은 유럽연합을 강타했다. 그
러나 유럽연합의 비교적 신속한 록다
운 조치와 대체로 잘 된 검사·추적 정
책은, 혼란스럽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
시킨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응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나아 보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백신이 빠르게 개
발돼 안도해야 했을 시점에 “상황은
빠르게 반전됐다”고 〈파이낸셜 타임
스〉는 지적했다. “현재 영국의 백신
접종 현황은 100명 당 40.5회, 미국
은 34.1회에 이르지만, 유럽연합은 겨
우 12회에 그쳤다.”

이런 차이가 생긴 한 가지 이유는 미
국과 영국이 긴급 상황에서 중앙집중
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라
는 데에 있다. 영국의 성공적인 백신
보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중앙
집중적 조직과 NHS 노동자들의 헌신
이 결정적이었다.

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 국

가들이 각자의 국력 일부를 공동 관리
하는 카르텔이다. 그러나 결국 결정권
은 가장 큰 회원국들에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매 위기를
자기 권한 강화에 이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 조달 대책을 일방
적으로 지배했지만 이를 엉망으로 그
르쳤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자기
지역에서 군림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
지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눈이
먼 나머지, 다른 정부들과는 달리 백신
을 확보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지
적했듯이 “유럽연합 관료들은 단지 위
험 회피적인 게 아니라 엉뚱한 위험에
회피적이었다.

“그들은 제약 회사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거나, 효과가 없거나 위험
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 백신
에 돈을 쓰게 될까 봐 심각하게 우려하
는 듯했다.”

흥정

“그래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백신 조달 과정을 지연시키고, 가격을
흥정하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거부
했다. 백신 보급이 너무 늦어져 많은
유럽인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위험
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한 듯 보였다.”

유럽연합의 굵푼 백신 접종은 심각
한 정치적 반발을 낳았다. 유럽 정치인
들은 영국-스웨덴계 기업인 아스트라
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느리다고 불평
했다.

여기에는 브렉시트의 쓰라린 여파
가 반영돼 있다. 유럽연합은 “불신의
알비온”[외교적 술수, 이중 잣대, 배신
을 일삼는 영국 정부를 모멸적으로 이
르는 표현]이 백신을 불공정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굴었다. 지난주
유럽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
이엔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수

출을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
다. “이런 행보는 영국이 유럽에 백신
완제품을 하나도 수출하지 않은 데 대
한 분노 때문이라고 유럽연합 관계자
들은 인정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가장 강력한 회원
국들은 반(反)백신주의적 공포를 부채
질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
롱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아무
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스트라제네
카 백신이 노인에게 효과가 없다고 발
표했다.

그 후,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16개국이 보조
를 맞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접종자 500만 명 중 30명에
게 혈전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점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
고 역설했다.

논평가 볼프강 뮌차우는 이렇게 비
판했다.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
한 책임전가다.

“유럽연합 정치인들이 아스트라제
네카를 계속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들
의 실수에서 주의를 돌리고, 브렉시트
와 결부된 영국의 ‘성공 스토리’에 흠집
을 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싱크탱크 ‘카네기 유럽’의 로사
벨푸어에 따르면, “모두들 허둥지둥하
고 사재기하고 숨기고 비난하고 있다.
누구도 상황을 진짜로 통제하지 못하
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진정한 문제에
대처할 자질과 수단을 갖추는 데에 실패
했다. 그 진정한 문제란 바로 감염력이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와 백신의 경
주다. 유럽 대륙 전역에서 감염이 늘고
록다운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47호 / 번역 최병현



사진: 로이터/게티

유럽연합의 지배자들은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백신 접종을 지연시켜 왔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앙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
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
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
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
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
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
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
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
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
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
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
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
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
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
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
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
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
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
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
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
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
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
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
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
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
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
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
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
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
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
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
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
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
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
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
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
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
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
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
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
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
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
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
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
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
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
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
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
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
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
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
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
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
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
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
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
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
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
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
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
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
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
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
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
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
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
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
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
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양효영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려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요컨대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면서 최대한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장철민 의원 안도 마찬가지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전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다른 범주로 규정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라고 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일감을 구하므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기존의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202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사람이 179만 명에 이른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결코 개인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에서 밀어내지 말라 지난해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 규탄 기자회견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통제를 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다. 예컨대, 우버나 한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앱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할당 업무를 채우지 못하면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보통의 자영업자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즉, 노동력)의 가격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과정이나 결과물도 통제할 수 없고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

받아 살아가는 다른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법적 다툼을 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을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명시해 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는 드문데다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다. 심지어 일부 법률의 적용을 인정 받은 경우에조차 플랫폼 기업들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종사자법이 도입되면 기업주들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데나 도움을 줄 공산이 크다.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양효영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영국 대법원은 기사들이 “우버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대표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다. 한국의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버 사측은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런 주장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 우버 사측은 기사들을 통제해 왔다. 알고리즘은 기사들의 시간과 업무수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우버는 수수료 조정으로 기사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기사들의 근태도 통제해 왔다. 기사가 제공한 루트에서 벗어나 운전하면 우버는 수수료를 삭감했고, 평점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아예 기사의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다.

기사들은 우버로부터 요금의 25퍼센트에서 많게는 50퍼센트가 넘는 돈을 떼이면서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까지 자기 돈으로 내 왔다. 우버는 이런 위장 자영업자 지위를 이용해 퇴직금,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며 돈벌이를 해 왔다.

2019년 우버가 막대한 적자를 본 상황에서, 우버와 우버이츠(음식 배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며 사실상 기업을 떠받쳐 왔다. 그러나 반대로 보호와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다. 지난해 런던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한 우버 노동자가 자가격리 중 몇 주간 굶주리다가 사망한 일도 있었다.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사측의 양보는 우버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둔 성과다. 영

국독립노조(IWGB)의 개인호출운전 자치부 부위원장 네이더 아와드는 이렇게 지적했다. “우버는 명백하게 기사들이 가한 압력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영국 우버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파업과 법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다. 우버만이 아니라 딜리버루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간 수차례 파업과 투쟁을 해 왔다.

팬데믹과 플랫폼 노동자

이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우버 노동자들에게 법률상 노무제공자 지위만 인정했다. 이는 노동법상 가장 폭넓은 보호를 받는 ‘피고용인(employee)’ 지위에 미치지 못한다. 해고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퇴직금·상병수당 등도 받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과 주요국 정부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제3지대를 만들어 일부 보호를 제공하

는데, 플랫폼 기업주들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장철민 의원 안은 플랫폼 기업을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은 ‘중개업’ 또는 ‘프로그램 업체’일 뿐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변명해 온 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대리운전노조의 사용자로서 카카오톡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했지만, 카카오톡이 리터는 자신들은 “중개 플랫폼”이라며 교섭을 거부해 온 바 있다.

플랫폼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제공 방식이나 보수를 통제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규정하지만 이 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부과되지 않는다. 고작 서면 계약서 체결, 부당한 업무 요구 금지,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10~15일 전 공지 의무 수준이다.

셋째,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조항들도 실효성이 없다. 대체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추상적인 말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 강제력을 가지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가장 강조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

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법령들은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한참 뒤로 미뤄 두었다.

게다가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게 정보를 요구해도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만들어 놔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법을 어길 경우 플랫폼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고작 최고 500만 원 수준이라서, 기업들에겐 부담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최선책인 양 하지만,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느 노동자들처럼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을 벌여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할 잠재력이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우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노동자성을 일부나마 인정을 받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이 노조를 만들고 시위와 파업을 벌이는 등 이런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투쟁을 더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 것이다. 우버 노동자들은 노조 인정, 부당해고에 항의할 수 있는 절차, 그간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등의 소급 지급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우버 노동자들이 얻어 낸 이번 성과는 한국에서 비슷한 조건에 맞서 싸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들이 너무 불안정하고 파편화돼 있어서 싸울 수 없다는 일각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할 수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쿠팡이츠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의 배달료 인하에 항의하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도 최근 사측이 ‘변칙 배달’(45분 내 배달)을 실시하며 노동강도가 크게 늘고 수입이 줄어서 이에 항의하며 시한부파업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전진하기를 바란다.

애틀랜타 총격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해 극우·인종차별에 맞서야

김준호

3월 16일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그중 1명은 한국 국적자이다.)

범인 로버트 애런 톰은 ‘아시아인을 모두 죽이겠다’고 외치며 총기를 난사했다.

이번 공격은 아시아계에 대한 극우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급증하는 배경에서 벌어진 것이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혐오 중단하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노린 인종차별적 공격이 폭증해, 총 3795건(그중 물리적 공격은 421건)이 벌어졌다고 집계했다.(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계가 대상이 됐는데, 전체 피해자의 42.2퍼센트가 중국계이다.(한국계는 14.8퍼센트로 2위)

이는 재위 시절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그 때문에 극우가 부상한 것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대(對)중국 강경언사를 일삼고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겨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트럼프는 “중국산 독감” 운운하며 중국 때리기 수위를 높였다.

팬데믹과 경제 모두에서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책임을 전가해 재선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이었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극우 운동이 위협하게 부상했다.(관련 기사 본지 351호 ‘트럼프가 위협천만만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팬데믹 초기부터 미국 여러 곳에서 소위 ‘반(反)마스크’ 극우 무장 시위가 벌어졌다. 인종차별이 심한 조지아주에서도 그런 운동이 성장했고,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지난해 4월부터 방역을 완화했다. 확진자가 폭증했지만, 극우는 기세등등해졌다.

이에 극우 무장 시위대는 지난해 8월 애틀랜타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에 총격을 퍼부었고, 올해 1월 6일 미국 극우의 의사당 난입 때도 의사당을 향해 진격했다.

그런 시위 대열에서는 “코로나19는 ‘차이-나’(CHY-NA)에서 수입된 바이러스”라고 적힌 티셔츠가 눈에 띄었는데, 이 티셔츠는 이번 총격 살인범 롱이 체포된 체로키카운티의 전직 보



사진 출처: Andrew Rando/블라카

백인 우월주의 극우가 부상하면서, 제2, 제3의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벌어질 위험도 커졌다. 3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 추모 및 인종차별 규탄 집회

안관보가 소유한 공장에서 인쇄된 것이다. 체로키카운티 보안관 제이 베이커는 톰의 “범행 동기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보안관 베이커가 SNS에서 이 티셔츠 판매를 홍보한 적이 있었다.

롱 자신이 극우 단체의 회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증오를 터뜨리기가 쉬웠을 것이다.

바이든

19일 바이든과 해리스는 애틀랜타를 함께 방문해 “침묵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사살한 카일 리튼하우스를 찬양한 트럼프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바이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은 증오범죄 가중처벌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이는 단순한 전시행정 식 대처다.(이미 현행법으로도 증오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바이든 정부의 방향은 오바마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정치인의 인종차별적 주장이 공공연하게 개진되는 분위기에 침묵했다.

2014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오바마는 “자성”을

말하는 한편, 중무장 경찰로 운동을 진압했다.

오바마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를 숙야 낸다면서도, 비인도적 강제 수용소를 세웠고, 유색인종 이주민을 300만 명이나 강제 추방했다. 바이든 정부 인사 한 명은 지금도 이민자 아동 1만 3000명 이상이 강제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그중 400명 이상이 마실 물도 마땅치 않은 처지임이 폭로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으로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수립했다. 지금은 중국과의 갈등이 이 전략이 처음 수립되던 때보다 훨씬 첨예해졌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코로나19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고 있다”며 그 자신도 중국 때리기를 부추긴 바 있다. 대중국 강경 기조는 바이든이 대변하는 미국 지배계급이 트럼프와 공유하는 것이다.

대중국 강경 기류 속에서는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치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랬듯 극우가 이를 거름 삼아 자랄 수 있다.

바이든은 이런 증오가 자라나는 토양인 심각한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41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3월 6일 미국 상원은 바이든이 제안

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수퍼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성인 1인당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아니라 일부 성인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게다가 실업급여 액수는 기존 주 400달러(약 45만원)에서 300달러(약 33만 원)로 내렸고, 최저임금 인상 계획도 빠졌다. 반면 제약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으로는 약 630억 달러(70조 원)가 책정됐다.

이런 법으로 미국 권력층과 대기업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대중의 고통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일 것이다. 2008년 이후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데다 팬데믹까지 덮치며 불평등이 더한층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국 대중의 쓰라림은 깊고 광범해질 것이다.

대중 행동

그런데 고무적이게도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계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시위 참가자들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라고 옳게 규탄했다.

뉴욕 시위에 참가한 예인 동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겹쳐 우리 일상을 진정 병들게 하는 데에 맞서 싸우려 시위에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는 고등

학생들이 조직한 행진에 수백 명이 참가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시위에서 참가자 한 명은 이렇게 연설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코로나19 이래로 급증했지만, 없던 차별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미국답지 못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미국에 아로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코로나19 시기에 대중이 겪는 고통과 분노와 만나 다인종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극우·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인종을 가로질러 단결할 수 있다. 투쟁으로 인종차별적 증오를 키우는 극우, 그들을 말로만 비난하고 그들을 용인하는 정부들, 그리고 경제 침체의 대가 전가에 맞서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